

# 환경문제, 정부의 意志가 최대 관건입니다

■ 편집부



● 근 4년간 보사위 활동을 해오셨는데, 평소 환경 문제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동안 경제개발우선주의로 인해 파생돼 거의 무방비 상태로 산재해 있는 환경문제들을 보면서 보사위 일을 맡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국민의 '환경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국민전체의 공유물이죠, 따라서 이를 신탁 받은 정부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될 줄 압니다.

● 광화학스모그출현, 폐놀사태 등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이나 기업의 환경의식, 정부의 대처방안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내년도 환경처 예산 삭감조치를 보면 정부측의 의지가 약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환경원년'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환경문제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때도 예산이 삭감됐었죠. 이번에도 환경처가 요청했던 9천6백79억원이 4천67억원으로 예산총액의 58%나 깎였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내년에 계획중인 하수종말 처리장이며,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건설하겠습니까?

타부처에 비해 워낙 힘이 부치는 부서라지만, 정부의 환경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선진국들은 국민총생산의 0.5~1.7%를 환경분야에 투자하는데 말입니다.

땅에 떨어진 기업윤리 역시 개탄스럽습니다. 기준치내로 매연을 배출했는데 왜 농작물고사 책임을 져야하며, 기준치는 뭐하려고 만들었냐며 따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준치는 말 그대로 '기준'일뿐, 기준치 이하이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잠재적인 위해 영향은 말할것도 없고요.

●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이젠 환경업무의 일부가 지방의회 차원으로 이관될 추세입니다. 지방자치체가 지역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 이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전 공해가 심각한 여수, 여천, 광양만 지역에 관심이 많아 자주 애길하는데, 그쪽에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전엔 농산물피해보상으로 공단에서 70억원을 보상해준일도 있었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어떻게 공해가 없다고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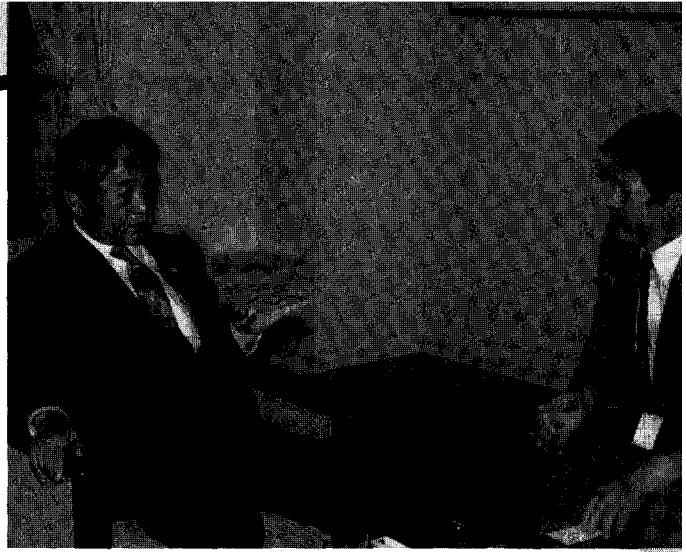
정책입안자들의 탁상공론보단 현지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면, 앞으론 많이 좋아지리라 전망합니다.

● **얼마후면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동안 활동한 성과 혹은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주시죠.**

—폐기물분야에 관한 자료를 구하고 하는데, 폐기물 배출총량이며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믿을만한 정확한 자료파악이 어렵더군요.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발족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적어도 1심판결권한 정도는 갖춰야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연성만 입증되면 무과실책임이라도 보상해줘야 마땅합니다. 이에 관한 독립방안을 제출, 이번 회기에 다루려고 합니다.

13대 국회는—특히 야당측에서—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제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이제 13대 국회를



“

무엇보다도 저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미실 국민의 '환경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국민전체의 공유물이죠, 따라서 이를 신장받은 정부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을 결코 잊어서 안될줄 압니다.

”

마감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어쩌면 과도적인, 불가피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환경분야의 선진국인 일본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진 숱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요. 그들은 환경행정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 한시적인 긴급조치를 발동, 서너번 되풀이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 역시 정부의지의 표명으로도 공해방지, 환경보전을 위한 긴급조치를 만들 용의가 없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국민이나 기업들의 각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선행해 정부의 의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